

보 도 자 료

(2024. 7. 23.)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위원장 박균택, 이용우)
김용민 국회의원·민형배 국회의원·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인권연대·인권평화연구원

민주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탄핵제도를 고민한다 탄핵제도 활성화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 관련 전문가 토론회

일시 • 2024. 7. 24.(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문의/ 인권연대 • 서울시 중구 만리재로 37길 8. 세방빌딩 3층/ 전화 : 02-749-9004 / 전송: 02-3672-0438
전자우편: rights1999@naver.com/ 홈페이지: <https://hrights.or.kr/> 담당 고유기 정책실장(010-9631-0092)

○ 인권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위원장 박균택, 이용우), 김용민 국회의원, 민형배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 인권평화연구원은 7월 24일(수)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민주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탄핵제도를 고민한다”는 주제로 탄핵제도 활성화를 위한 헌법재판소(헌재)의 역할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탄핵제도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무원의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헌법이 정한 안전장치입니다. 탄핵 소추 대상이 되는 어떤 공직자도 헌법과 법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의 검사 탄핵 소추 추진과 관련하여 검찰총장을 비롯한 여러 검사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국회의원에 대해 ‘직권남용과 명예훼손’인지를 따져보겠다는 겁박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이는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법집행 공무원들이 국민 앞에서 법치주의 원리 등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회가 탄핵소추한 사건을 심판할 헌법재판소(헌재)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는 진보나 보수를 떠나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헌재가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헌재는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했던 안동완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에서 “검사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하였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한 국가범죄로도 부족해서 조작간첩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던 중대한 범죄마저 검사 파면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면, 헌법상 탄핵 제도는 사실상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어떤 역할도 못하는 장식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 이에 인권연대는 헌법상 탄핵제도의 의미를 짚어보는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탄핵제도를 통해 헌법과 법률을 지키려는 헌법적 요구를 살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 및 보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주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탄핵제도를 고민한다

탄핵제도 활성화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 관련 전문가 토론회

○ 개요

- 일시 : 2024. 7월 24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인권연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위원장 박균택, 이용우), 김용민 국회의원, 민형배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 인권평화연구원
- 주관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인권평화연구원

○ 토론회

- 사회 : 서보학(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 :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 이석배(단국대 법과대 교수)
 - － 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장은주(영산대 교수, 정치철학)
 - － 하승수(변호사)